

사라진 해외주식 마케팅… “체감상 불리해진 건 개인뿐”

고환율 국면 영향… 증권가 눈치밥 이벤트·광고 등 프로모션 정리 나서 투자자들 “거래 환경만 불리해져”

“해외주식 이벤트 때문에 특별히 투자한 것도 아닌데요. 오히려 정보만 줄어드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볼멘 소리다. 고환율 국면에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주식 마케팅에 제동을 걸자, 증권사들이 일제히 신규 이벤트와 광고를 중단하면서다. 투자자들은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투자 성향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체감상 불리해진 건 개인뿐”이라고 말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3일 키움증권은 ‘키움증권 미국주식 톡톡’ 채널을 오는 26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채널은 2018년 9월 개설된 이후 약 7년간 운영돼 온 대표 해외주식 정보 창구로, 구독자 3만6000명대 수준의 ‘서학개미 필수 채널’로 통했다. 당국의 마케팅 자체령이 단순 이벤트 중단을 넘어, 개인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정보 접근성 축소로까지 번지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벤트가 사라진다고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80.1원)보다 3.5원 오른 1483.6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비용은 올라가고 정보는 줄었다”는 억울함이 두드러진다. 투자관련 오픈 채팅방에는 “환율이 높아서 투자 못하는 것이지 이벤트 탓이 아니다”, “쿠폰·우대가 없어져 손해는 개인이 본다”, “정보 채널까지 닫히면 뭘 보고 판단하나” 같은 반응이 잇따른다. 투자 판단의 책임은 개인에게 남아 있는데, 거래 환경만 불리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증권사들은 당국 기조에 맞춰 해외주식 관련 프로모션을 사실상 정리하는 분위기다.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은 신규 고객에게 제공하던 ‘투자 지원금’ 이벤트를 종료했고, 토스증권도 거래

수수료 캐시백 혜택을 조기 마감했다.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역시 타사 해외주식 입고 시 현금을 지급하던 이벤트를 멈추고, 미래에셋증권도 해외주식 관련 프로모션을 일시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는 당국의 현장 점검이 ‘신호’로 작동했다고 본다. 토스증권과 키움증권의 경우 해외주식 관련 현장검사가 진행 중이지만, 업권에서는 특별한 위법이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분위기고 실제로 드러난 문제소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서학개미 증가 흐름이 계속될 경우, 보여주기가식이라도 해외거래 규모가 큰 증권사부터 순차적

으로 현장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돼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문제가 없더라도 ‘점검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 몸을 사리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배경에는 고환율 국면이 깔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큰 증권사들을 잇달아 불러 마케팅 관행을 점검했고, 지난 18일에는 미래에셋증권·메리츠증권·키움증권·토스증권 등 주요 증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고환율 상황에서 공격적인 해외투자 마케팅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들이다. 이후 업계 전반으로 ‘신규 이벤트·광고 중단’ 기조가 빠르게 확산됐다.

증권사 내부에서는 이번 흐름을 마냥 부담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도 있다.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일부 존재한다.

반면 투자자들은 “혜택은 줄어드는데 투자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환율이 잡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삼성증권

중개형 ISA 잔고 7조 달성

지난해 말 대비 잔고 규모 두 배 증가

삼성증권의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ISA) 잔고가 7조원을 넘어섰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증시 회복과 함께 절세형 계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잔고 규모는 약 두 배 증가했으며, 고객 수는 17% 늘어 137만명을 넘어섰다.

삼성증권은 잔고 7조원 돌파를 기념해 연말까지 중개형 ISA 신규 및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중개형 ISA 절세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신규 고객 대상 혜택과 기존 고객의 추가 자금 유입, 계좌 내 금융상품 투자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허정윤 기자

신한자산운용

타깃데이트펀드 3종 순자산 총액 2조 돌파

신한자산운용의 타깃데이트펀드(TDF) 시리즈 3종 순자산이 2조원을 넘어섰다.

23일 신한자산운용에 따르면 마음편한 TDF, 장기성장TDF, 빠른대응TDF 등 TDF 시리즈 3종의 순자산 총액은 2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약 1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순자산은 올해 들어서만 6720억원 증가했다. 특히 시장 국면에 따라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적용하는 ‘신한빠른대응TDF2030’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해당 상품은 연초 이후 수익률 15.1%를 기록하며 동일 빈티지 내 경쟁 상품 26개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짧은 환매주기(4영업일 환매대금 지급)를 적용해 투자 편의성을 높인 점도 특징이다.

/허정윤 기자

유안타증권

W Prestige 강남센터 신설

유안타증권은 지난 22일 강남권 지점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W 프레스티지(Prestige) 강남센터’를 삼성역 인근 섬유센터 5층에 신설했다고 23일 밝혔다.

“W Prestige 강남센터”는 강남권을 대표하는 리테일 거점으로 유안타증권의 최우수 마스터PB인 박세진 센터장을 중심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PB 30여 명을 집중 배치해 고액자산가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및 차별화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



(왼쪽부터)김봉균 Retail전략본부장, 최은정 W Prestige 강남 부센터장, 박세진 W Prestige 강남 센터장, 뤼즈평 대표이사, 신남석 Retail사업부문대표, 권동훈 본부장. /유안타증권

금감원, 펀드 등 투자 과정 분쟁사례·유의사항 공유

ETF 등 자주 접하는 상품 중심 소개 “구조·비용 등 상품별 차이 확인해야”

#. 매달 적립식으로 납입해 온 펀드를 5년 만에 해지한 A씨는 환매대금에서 예상보다 많은 수수료가 빠져나간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했다. 장기 투자 상품이어서 환매 수수료는 1% 수준일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부 금액에 3%와 5%의 수수료가 적용됐다. 금융회사의 설명은 “최초 가입일이 아니라 매월 납입 시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산정된다”는 것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투자 과정에서 구조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분쟁이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상품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정리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23일 공개했다. 펀드와 ETF, 해외주식, 신주인수권 등 개인투자자가



금융감독원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자주 접하는 상품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쟁점을 중심으로 사례를 모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펀드 환매수수료 분쟁은 적립식 상품에서 특히 잦다. 동일한 펀드라도 납입 시점별 보유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 보유=저율 수수료’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ETF 투자에서도 비용 구조를 둘러

싼 오해가 이어지고 있다. 스왑 등 장외 파생상품을 활용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실물복제 방식과 달리 스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투자자는 최종 수익률이 낮아진 뒤에야 구조적 차이를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제일 차이에 따른 미수금 발생도 빈번한 분쟁 유형이다. ETF 매도 대금으로 같은 날 다른 금융상품을 매수했는데, 상품별 결제일이 달라 미수금과 이자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금융회사 측은 거래 화면과 설명서에 결제일이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식 분할이나 병합 과정에서 정보 반영이 지연되며 일시적으로 거래가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분할 비율이 적용되는 며칠 동안 매도가 불가능해 손해를

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업종 확대

AI·에너지 등 혁신기업 상장 촉진

한국거래소가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등 혁신기술 분야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공개한 시행세칙개정안을 통해 혁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질적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AI 산업, 신재생 및 에

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산업, 우주 산업에 대해 각 산업의 구조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AI 산업의 경우 ▲AI 반도체 설계·생산 관련 기업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기업 ▲피지컬 AI 개발 관련 기업 등으로 구분해 각 분야에 필요한 핵심 경쟁력 보유 여부를 평가하게 했다.

또,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에너

지 기업에는 태양광 셀·모듈의 강도·내구성 등 제조물의 품질과 해상지반공사 기술 및 발전설비 설계·시공 능력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한 AI와 에너지, 우주 등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인력에서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특허 취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달 2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시행세칙 개정을 확정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처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

련돼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일환이다.

해당 방안에는 AI·우주산업·에너지 등 핵심기술 분야 대상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을 도입해 코스닥시장의 혁신기업 상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주요 연기금 운용평가에 코스닥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시장 투자 유인을 높이고, 코스닥시장 핵심 기관투자자인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혜택 한도를 확대하는 등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godhe@